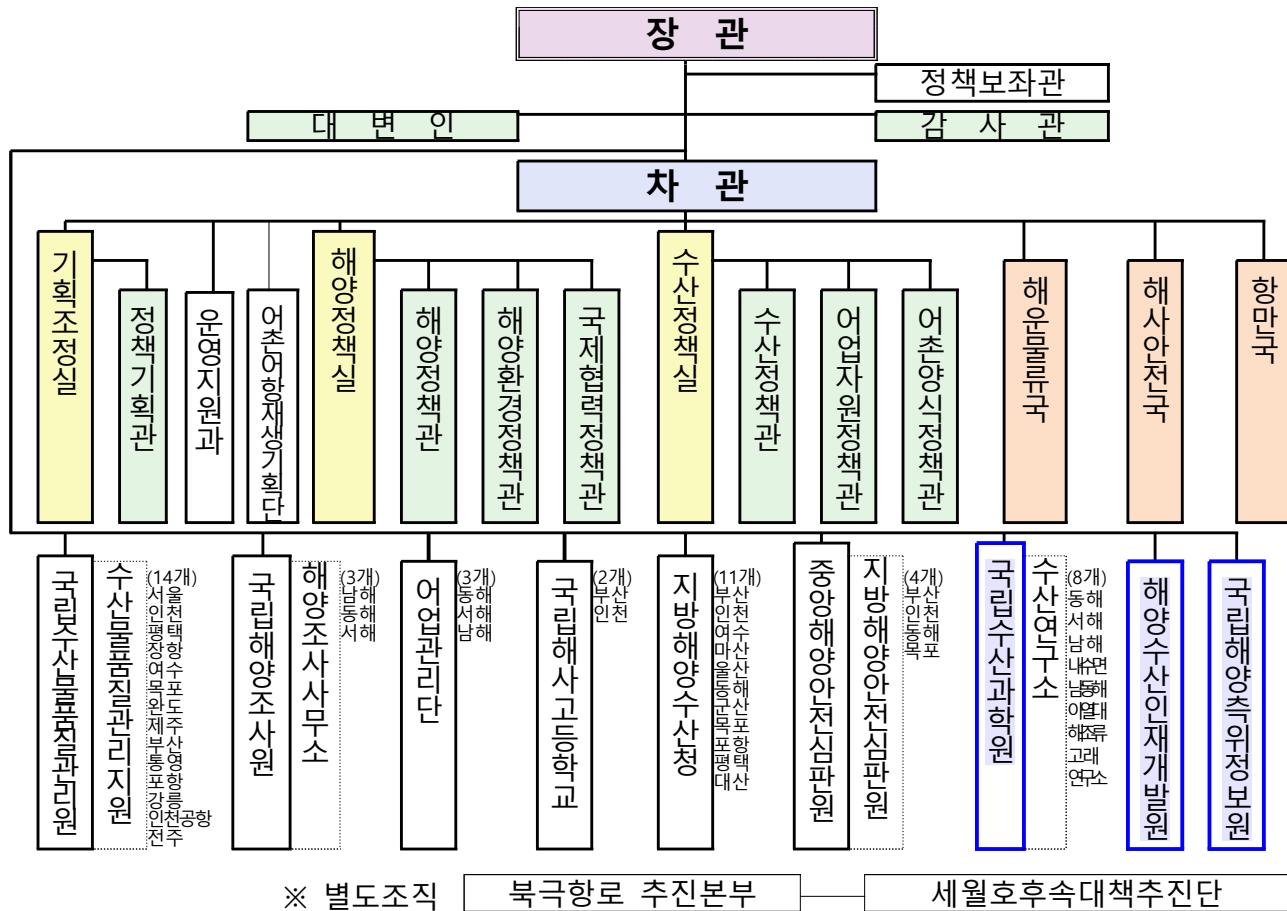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2025. 12. 23.

I. 일반현황

① 기구 및 조직 현황

- ◆ 본부 : 장관, 1차관, 3실, 3국, 9정책관 (51과 6팀, 자율기구 포함)
- ◆ 소속기관 : 68개(1차 22개, 2차 41개, 3차 5개) * 책임운영기관 : 3개



② 인원 현황

구 분	직급별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타
합계	정원	4,383	2	39	18	81	80	457	3,225	481
	현원	4,109	2	37	19	100	60	449	3,010	432
본부	정원	625	2	15	14	36	58	216	276	8
	현원	684	2	15	16	58	42	222	320	9
소속 기관	정원	3,758	0	24	4	45	22	241	2,949	473
	현원	3,425	0	22	3	42	18	227	2,690	423

③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 (A)	2026년 예산 (B)	증 감 (B-A)	(B-A)/A
계	6,781,585	7,356,579	574,994	8.5
① 수산·어촌	3,187,438	3,479,351	291,913	9.2
② 해운·항만	2,082,895	2,142,770	59,875	2.9
③ 물류등기타	952,320	1,057,180	104,860	11.0
④ 해양환경	345,865	430,527	84,662	24.5
⑤ 과학기술	213,067	246,751	33,684	15.8
※R&D(별도 통계)	748,810	851,696	102,886	13.7

④ 산하 공공기관 현황(17개)

◆ 총 17개 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 공공기관 15개

기관 구분	기능 및 역할
■ 준시장형 공기업*(1개)	* 자체수입이 85% 미만인 공기업
해양환경공단	·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개)	* 자체수입 비중이 낮아 정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기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교통사고 예방, 해양교통안전체계 운영·관리 지원
■ 기타 공공기관*(15개)	* 공공기관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해당하지 않는 기관
국립해양박물관	· 해양문화·산업유산 발굴·보존·연구·전시
국립울진해양과학관	·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전시 및 교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D 기획·관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해양·극지 연구 및 해양과학기술·자원 연구·개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연구·교육
한국해양조사협회	· 해양조사 기술·제도 연구 및 교육, 해양정보 수집·제공
한국수산자원공단	· 수산자원 인프라(바다숲, 산란·서식장 등) 조성
한국어촌어항공단	·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한국해양진흥공사	·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선박, 항만 등) 투자 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해양수산인력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관리
부산항만공사	· 부산항(수출입·환적화물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영
인천항만공사	· 인천항(수도권 관문 및 대중국 무역 기지)의 개발과 관리·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	· 여수·광양항(액체·자동차 특화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영
울산항만공사	· 울산항(유류·가스 중심 항만)의 개발과 관리·운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 관리

II. '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① '25년 주요 성과

□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 및 해양수도권 육성 기반 구축

- 해수부 임시청사 발표(7.10), 예비비 확보(8.18), 직원 지원대책 마련(9월), 사무공간 공사 등을 통해 대통령 공약·지시 신속 이행 완료(12.21)
- 해수부 내 '북극항로 추진본부'(1급 본부장 등 31명)'를 출범(12.16)하여 북극항로 개척, 해양수도권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 (구성) 국조실, 해수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
(역할) 북극항로 시대 대비 전략 기획, 항로 개척 지원, 해양수도권 인프라 투자 등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12.4, 시행)을 통하여 공공기관·해운기업 이전 등 집적화 기반 마련
 - * 해운기업 2개 유치(12.5): SK해운(매출 2조원업계 7위), 에이치라인 해운(매출 1.3조원업계 10위)

□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하고, 해운·항만 GX/AX 전환 기점 마련

-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였으며, 해운선사 경영 안정을 위한 위기 대응 펀드를 확대(해양진흥공사, 1 → 2조원, 9월)
 - * 미주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 2척 투입, 중소·중견기업 전용 선적 공간 8천TEU 제공
-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7.14. '32년 1단계 완공)하고, 한진해운 파산('16) 이후 상실한 국제 물류공급망 거점 회복 방안*을 수립(12.16)
 - * 4조원 규모 해운물류 인프라펀드 운용, 해외물류센터 40개소(~'30) 확보 등 발표
- 국적선사 HMM은 국내 최초 메탄올 컨테이너선 6척 건조(12.5), 13,000TEU*급 LNG 컨테이너선 12척 도입 결정(10.17) 등 친환경 전환
 - * 6.1m 표준 컨테이너 단위(Twenty-foot Equivalent Unit)
- 자율운항선박*(레벨 3)의 국제항로 실증(6회, 韓-中-동남아) · UAE 순방 계기 스마트항만 협력 추진('25.11~)
 - * (레벨1) 의사결정 지원 (레벨2) 선원 승선·원격제어 (레벨3) 선원 미승선·원격제어 (레벨4) 완전무인

□ 수산식품 수출 신기록을 달성하고, 고수온 재해 피해도 최소화

- '25.11월 기준 김 수출액은 10.4억불 기록, 연말까지 11억불 이상 달성 전망(라면에 이어 K-푸드 수출액 2위)
 - * K-푸드 수출액 123.3억불('25.11) 중 수산식품은 30억불로 약 24.3% 수준
↳ ¹라면 13.8 ²김 **10.4** ³과자 6.9 ⁴참치 5.0 ⁵김치 1.5
- 고수온 대응 장비 선제 보급(2차 추경 20억원), 양식장 긴급방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역대 최장 고수온(85일)에도 전년 대비 피해 87% 저감
 - * 고수온 기간/피해액: ('23) 57일/438억원 ('24) 71일/1,430억원 ('25) 85일/180억원

* V(7.10): 폭염 어업피해 방지대책 신속 추진, V(8.12): 양식장 긴급방류 시 보상 확대

□ 제4차 UN해양총회('28.6) 유치 및 NDC 달성 기여 탄소흡수원 국제 인증

- 세계 최대 규모 해양 행사인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확정(12.9)
 - * UN총회 V 기조연설(9.23): UN해양총회에서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연대 구축
- IPCC*의 갯벌·해조류 탄소흡수원 인증('25.10)으로 연간 57만톤의 탄소감축원 확보하여 NDC 달성을 기여
 -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2 보완점

□ 여객선 좌초 등 해양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인명피해 저감 필요

- '25.11월 기준, 어선사고 99명 등 총 126명 인명피해 발생

□ 국내 해운·항만 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전환 가속 필요

- 환경규제 대상 선박 1,074척 중 친환경 선박은 128척(11.9%)에 불과 ('25.11월 기준)하고, 국내 완전자동화 항만은 부산항 신항 7부두 1개소

□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업 구조 개혁 지연으로 연근해 어업 생산량 감소

-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00년 118만톤에서 '24년 84만톤으로 감소

3 향후 업무추진방향

정책
비전

북극항로 시대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 실현

목표
(30년)

<해양수도권> 행정·사법·산업·금융 동남권 집적	<해운항만> 친환경선박 확충(現 128척 → 246척)
<수산> 수산물 공급 확대(現 360만톤 → 400)	<안전>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중점 추진과제

①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국정과제 56

- ① 상업 운항 준비
- ② 선사 지원체계
- ③ 국제협력 주도
- ④ 해양수도권 도약

②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국정과제 56

- ① 친환경 선박 전환
- ② 자율운항선박 개발
- ③ 친환경 항만운영
- ④ 스마트 항만 확산

③ 전통 수산업 혁신 국정과제 71

- ① 생산 혁신
- ② 수산물 수출 확대
- ③ 근로환경 개선
- ④ 어촌 소득 증진

④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국정과제 71

- ① 해양관광 활성화
- ② 해상풍력 보급지원
- ③ 해양산업 창업 지원

⑤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국정과제 76

- ① 안전관리체계 혁신
- ② 불법조업 근절
- ③ 글로벌 리더십

쟁점
과제

부산항 3.0,
세계 최고 항만 대도약

해상풍력 확산 지원

III. 중점 추진과제

①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국정과제 56)

대통령 말씀

북극항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 놓쳐(부산 타운홀 미팅, 7.25)

- ▲ (운항시기) 현재는 5개월 → '40년 이후 6~9개월 운항가능 전망(극지연구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운항 자체					쇄빙+내빙		일반선		쇄빙+내빙	운항 자체	

- ▲ (안전·경제성 등) 항로 데이터·운항경험·전문인력 부족, 물동량 확보가 관건

- ▲ (對러 제재) '러' 연안 북동항로 이용 시 '러' 정부는 운항 사전 신고 및 자국 쇄빙선 임차 의무화(미·EU 등은 러 기업과 거래 시 제재 부과)

□ 북극항로 상업운항 본격 준비

- 북극항로 경험·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시범운항(8~9월) 추진
 - 제재 지속 시 경험·기술 축적을 위해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대안 검토
 - * 환경 제약(유빙多), 짧은 운항시기(8~9월), 항만 인프라 부족 등 북동항로 대비 경제성 ↓
 - 제재 해제 시 유럽(로테르담 등)을 잇는 컨테이너 항로와 러시아 자원(LNG·석유 등) 수송 벌크항로 상업운항 추진(산업부 협조)

□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선사 지원체계 마련

- 내빙·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국산화 추진('26~'30, 200억원)
 - * 쇄빙 LNG운반선·유조선·연구선 건조 기술 기 보유,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 미 보유
- 쇄빙선 건조보조금 지원, 항만 시설사용료 감면(50~100%), 선박금융 투자금리 인하(1%p)·담보인정비율 상향(평균 70 → 90%) 등 인센티브 제공
- 운항 시뮬레이션 등 북극항로 특화교육 개설(해양수산연수원, '26~)
- 북극운항·화물, 유빙 등 정보제공('26), 북극 운항 24시간 관리체계 구축(~'30)

□ 북극항로 대외변수 대응 및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 북극진출을 지원할 쇄빙연구선*을 추가 건조하고, 해빙 분포 등 항로 예측체계를 구축('26~'30년, 총 200억원)
 - * '22~'29년 / 총 3,332억원 / 16,560톤 / LNG-디젤 이중연료
- 북극이사회(러시아, 노르웨이 등 북극해 인접 8개국) 옵서버 국가로서 워킹그룹 참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북극 선도국 입지 확보
 - 국제포럼(북극프론티어, 북극서클 총회) 중심 양자협의회, 북극협력 주간 개최, 북극아카데미 등 추진
- UN해양총회('28) 계기 북극해 연안국·관심국과 북극항로 운항, 북극 환경보호 등 협력을 모색할 북극항로 정상회담 개최 추진

□ 북극항로 진출 거점 역할을 할 해양수도권 육성 추진

-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안)'을 제시('26.2)하고, 북극항로 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고 의결 추진('26.上)
 - *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26~)
- 해양관련 기업·공공기관·해사법원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
 - 기업 이전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해운기업 추가 유치
 -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 이전 비용, 택지 우선공급 등 지원 가능
 - 해양수산 공공기관, 해사법원 신설(~'30, 법원행정처) 등을 통해 집적화
-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26, 금융위),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등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해양수도권 육성 지원

☞ 행정·사법·금융·기업 인프라를 집적시켜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할 해양수도권 조성

* 물류 기반·연관 산업 지원: ☞ 쟁점과제 ① '부산항 3.0'(17페이지)

② 친환경 · 스마트 해운 · 항만 경쟁력 강화 [국정과제 56]

□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 친환경 선박 전환 현황 및 분석 】

- ▲(국제동향) 국제해사기구, 국제운항선박 온실가스 배출량 '50년까지 "제로화" 합의('23)
- ▲(규제대상) 5천톤 이상 국제운항선박 1,074척 중 친환경 선박 128척(11.9%, '25.11월 기준)
- ▲(목표) 5년간 118척 추가전환(약 2배 증가, 22.9%), '50년까지 100% 전환
- ▲(대응현황) 대형선사는 국제규제 관망 후 투자 희망, 중소선사는 자금 등 전환 역량 부족

- 친환경 전환을 위해 다양한 투자 유형을 통한 재원(90조원 추정) 마련

투자 유형	주요 내용(안)
공공 정책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신조 투자 확대 (2.5 → 2.9조원, ~'26)◦ 해양진흥공사 납입자본금 순차적 확대 (現 3.13조원)
민간 조각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1척을 다수 지분으로 나누어 일반 투자자로부터 新造 자금 유치
민간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금 모집 후 신조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대상,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세율(現 14%) 인하 추진

- 중소선사 친환경 전환 유도를 위해 신조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 ('25, 231 → '26, 280억원)하고, 수수료(보증 등) 인하, 녹색채권 매입 등 지원
 - 친환경선박 항비(입출항료 등) 감면('25, 0 → '26, 10%) 등 인센티브 발굴

□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지원

-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1,805억불 성장(~'32) 전망(Acute Market Reports, '22)
-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MASS Code)이 '32년 발효될 예정이므로 국제표준(안) 마련 논의에 적극 대응
 - * 자율운항선박의 설계, 승인·검사, 운용 등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미준수시 국제운항 불가
- 완전무인 레벨4 수준의 자율운항 핵심기술을 개발할 R&D(해수부·산업부 공동) 본격 착수('26.下, '26~'32 6,034억원)
- 민간의 자율운항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제도* 운영('26~)
 - * 「자율운항선박법」 시행('25.1) 후 실증해역 지정(울산항, '25.12) → 실증 실시('26.上~)

□ 탄소중립 친환경 항만 운영체계 구축

- 친환경 연료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LNG 연료공급·화물하역 동시작업 기술 고도화, 메탄올 병커링선 마련, 암모니아 병커링 실증 추진
 - * MSC(세계 1위 선사), 머스크(세계 2위) 대상으로 LNG('25.7) 및 메탄올 연료 공급('25.10)

구분	LNG (저탄소)	메탄올 (저탄소)	암모니아 (무탄소)
기술	기반기술 既 확보, 안전성 제고 R&D 중	저장·이송기술 既 확보, 안전기술 연구 중	저장·이송기술 既 확보, 안전기술 연구 중
인프라	전용선· 저장시설 확보	전용선 無, 저장시설 증설 중	전용선 無, 저장시설 有
제도	완료	안전규정·표준절차 마련 중	안전규정·표준절차 마련 중
실증	완료	완료	실증 사례 無
과제	가격경쟁력, 안전관리	상업공급 활성화	최초 실증 성공

□ 피지컬 AI 실현 스마트 항만 확산

- 부산항 진해신항을 '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로 개발(선적 40 → 66개^{1위})'하고, 全 부두에 스마트항만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증대
 -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광양항을 시범항만으로 조성하고, 실적·경험 축적 후 전국 항만으로 점진적 확대
 - AI를 활용한 항만크레인 등 하역장비 자동화기술 개발(~'33, 333억원)
- UAE와 공동 기술개발 성과를 양국 항만(칼리파항-부산항 등)에서 실증·검증하고, 투자유치 및 국내·외 시장 공동 진출 추진
 - * 네이버, HD현대삼호 등 한-UAE 스마트항만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대통령 말씀

"한-UAE는 AI 등 첨단기술, 보건 문화 등에서 협력 강화"(UAE 순방, 11.19)

< 피지컬 AI의 스마트항만 적용 방향 >

① 장비 센서 → ② AI(인식/감지) → ③ AI(예측/판단) → ④ 물리적 제어

카메라, LiDAR,
IoT 센서, CCTV,
RTLS(GPS) 등

'컨' 위치, 장애물,
작업자, 흔들림,
장비 상태 등

최적경로,
작업 순서 조정,
고장·사고 예측 등

자율주행,
자율하역,
자율제어 등

3 전통 수산업 혁신 (국정과제 71)

□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변동, 어획량 감소에 대응한 어업 생산구조 혁신

대통령 말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자, 당장 대처해야 할 핵심적인 국가과제가 됐다."(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8.14)

- 수산자원 대비 과도한 어선세력을 집중 감척(예: 5년 이내)하고 대형화·현대화된 어선으로 선대를 개편하는 「어업 구조개선 계획」 수립('26)
 - * 5톤 미만 소형어선이 전체의 79.2%, 선령 21년 이상 어선이 40.6%(총 25,920척)
- 어선 크기제한(140톤)을 완화하고, 균해어선편드* 도입 검토
 - * 건조대금의 90%를 지원(정부 및 투자공사·은행 90%), 자부담 10%
- 감척으로 은퇴한 어업인에게는 귀어·귀촌 어업인 멘토, 어촌관광·체험 가이드 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를 지원
- 어획가능 물량을 어업인에게 할당하는 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 적용 확대에 맞춰 불필요 규제 약 50%(약 760여건) 조정·철폐

< TAC 참여어업 규제완화 실증 사례 : 삼치 금어기 조정 >

- (주요내용) TAC 참여, 전자어획보고 등 요건 이행시 규제를 완화
 - 삼치의 인천해역 회유시기가 금어기(5.1~5.31.)와 중복되어 지역 어업인의 삼치 어획 불가 → 규제완화 시범사업으로 금어기 조정(4.10~5.10)
- (효과) 인천지역 어업인 삼치 어획량 3배 증가('23. 40톤 → '24, 132톤)

□ 고수온 등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양식업 혁신

- 수온이 낮은 먼 바다와 동해에 신규 양식적지를 발굴하고,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하여 투자 및 규모화 유도
 - * 수산업 초혁신경제 과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생산·유통·가공, 연구개발 등 추진
- 기후변화, 어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양식품종을 특화*하고, 양식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간양식**을 확산
 - * 전남(해조류), 경남(어류), 제주(육상양식) 등 특화
 - ** 종자를 일정 크기까지 육성하여 양식장에 공급,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간을 단축

□ 유망 수산식품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수출국 다변화로 수출 확대

대통령 말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국무회의, 12.9.)

- 식품수출액 130억불 중 수산식품은 30억불(24.3%, 김 10.4억불 포함, '25.11)
→ '30년 수산식품 수출 40억불(김 15억불) 달성 추진
- 김 공급안정을 위해 어가-가공업체간 계약재배 및 양식장 확대 등을 검토하고, 품질제고를 위해 마른김 등급제 도입 추진

< 대표 수출 수산식품 : 김 성공사례 >

- (현황) 김은 한·중·일 등 동북아 3국만 생산,
↳ 한국산 김은 세계 교역량의 72% 차지('24)
* 김 수출액(억불) : ('10) 1.1 ('20) 6.0 ('25.11) **10.4**
- (성공비결) 현지 맞춤형 상품개발(김 스낵 등)
+ K-팝 등 한류 연계 마케팅
- (효과) 수산물 원물부터 수출까지 부가가치 창출
* (물김) 7,680 (마른김) 13,490 (조미김) 57,400 (원/100장)



< 뉴욕 순방 시 영부인 주재 김밥체험('26) >

- 수산식품 경쟁력 강화,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김 성공사례를 확산
 - 참치는 필렛가공 확대,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굴은 최대 소비자인 유럽 공략을 위해 개체굴 전환, 위생관리 등 추진

□ 온라인·직매장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 어획 후 바로 판매하는 선상위판시스템 구축(모바일기기, AI 판독기술 활용)
- 대도시권 소비지에 직매장을 설치하여 유통단계 감축(6 → 4단계)
-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재고 확보 후 수시 방출*
 - * 가격이 상승한 고등어·명태 비축물량(1,200톤, 잠정) 방출 추진 예정('26.1월~)
- 온·오프라인 할인 행사('26, 1,000억원) 수시 개최로 민생안정 도모
- 스마트 가공공장* 구축·지원(중기부 협업, '25.16개사 → '30.100개사)
 - * 중기부(자동화장비·센서 도입 등), 해수부(판로개척·품질인증·컨설팅) 지원

□ 수산업 균로환경 개선

대통령 말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국무회의, 7.24)

-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10 → 31명)과 **선주책임 강화***, 노후·유해 시설장비 교체지원 등을 통해 어선사고 저감
 - * 화재·전복 사고의 선주 예방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 어선, 양식장, 염전 등에서 수산업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어업인안전보건증진법」 제정 추진(~'27)
- 외국인 균로환경을 점검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25.5월 시범실시)을 정례화하고, **인권침해 업체는 강력제재***
 - * 허가·면허 취소, 정부 지원자금 회수, 정부포상 제한 등 최대수위로 제재
 - 외국인 어선원 통합관리*(고용·근로감독 등)를 위한 「어선원법」 제정
 - * 20톤 이상 어선의 어선원은 해수부, 20톤 미만은 고용부로 이원화되어 관리
 - 양식업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와 복지회관** 조성으로 균로여건 개선
 - * 단기근로 외국인력으로 공공기관이 직접관리 → 민간브로커 개입 차단
 - ** 외국인력 대상 주거, 교육, 편의·위생 등 제공('25, 9개소)

□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통해 어촌 소득 제고

- 바다숲을 조성·관리하는 어업인 대상 **탄소흡수 기여 활동비 지원**
- **부산물 자원화시설*** 조성으로 폐기비용 절감, 재활용 제품 생산·판매
 - * 불가사리(비료, 제설제), 굴 패각(보도블럭, 철강 부원료), 폐기비용 약 120억원/연 절감
- **어촌복지 버스**(*'25. 254 → '26. 332개 섬), **청년바다마을****(*'25. 2 → '26. 5개) 확대
 - * 섬, 어촌 등 인프라 부족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생활, 식품,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
 - ** 주거(청년주택단지), 일자리(어선청년임대, 양식장임대), 어촌계 가입 등을 일괄제공

4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국정과제 71)

□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 제고

대통령 말씀

“해양자원, 넓은 갯벌, 농어촌 생명력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충남 타운홀 미팅, 12.5)

어촌	지역별 해양관광거점					초광역권 복합해양관광도시
	+ 서핑, 스쿠버 다이빙 등 해양레저	머드팩, 해수욕장 등 해양치유	갯벌, 청정바다 등 생태공원	크루즈 기항지 관광객 유치		
낚시, 갯벌체험 등 체험형 콘텐츠	+ 해양거점 도시에 문화, 미식, 숙박, 쇼핑 등 융합					

머무르고, 소비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바다

- (어촌) 숙박·체험형 프로그램 개발로 어촌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전환
- (해양관광거점) 지역별 거점 중심 체험·체류 확대로 지역소득 제고
 - 서핑 등 해양레저를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 해양레저거점* 구축
 - * 전북 군산('26.上 개장)을 시작으로 제주, 경기 시흥, 강원 고성 등 확산
 - 완도, 태안 등 지역 특색·자원을 이용한 해양치유센터* 조성·운영
 - * 완도('23.11~) : 해조류 특화(누적 11만명) / 태안('26.1~) : 피부관리+근골격계 질환 예방
 - 규제 중심 해양보호구역(39개소, 3,125km²) 중 해양경관 등이 우수한 지역을 해양생태공원*으로 전환하여 관광객 유치와 함께 환경관리
 - * 총 4개소 지정(서산·태안 가로림만, 순천 여자만, 포항 호미반도, 신안·무안)
 - ↳ 유사사례 : 대표적 국내 생태관광지인 순천만 습지는 연간 400만명 이상 방문
 - 크루즈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부산항 국제여객 2터미널을 신축(~'29)하고, 지역관광 연계를 위해 선상심사 등 하선시간 단축(법무부 협업)
- (복합도시)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안 시·도별 최대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관광도시 개발 및 확산
 - * '25년 사업대상지 3개소 선정(경남 통영, 경북 포항, 전남 여수)

□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뒷받침

- 환경 영향분석을 위해 입지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해상풍력 1단계 예비지구 지정·발표('26.上, 기후부 공동) →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 * 풍황정보, 보호구역 등 규제정보, 어선활동, 어획량 등 총 250개 정보 통합·분석
- 어업인·수협이 참여하는 해상풍력 이익공유 모델 개발('26, 기후부 협업)
 - *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모델안을 마련(~'26.1)하고, 지역별 의견수렴 등 추진
↳ (현행) 지역주민 위주, 지구별 수협 미참여 → (개선) 어업인 참여 의무화, 지구별 수협 역할 부여
- 사업자, 지역사회 간 소통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입지정보망을 활용한 해저 송전망 적합입지 선정 지원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 해저 지형정보의 체계적 관리 등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지원
 - * 송전선 설치·유지관리·정보보안 기준 마련, 장비 무인화기술 개발연구 추진('26~'30, 222억원)

※ 해상풍력 확산 지원 : ☰ 쟁점과제 ② (19페이지)

□ 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해양 신산업 창업 열풍 조성

대통령 말씀

"바이오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으로 중요"(인천 바이오토론회, 9.5)

- 갯벌, 바다숲(해조류) 조성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도출
 - * 해조류별 온실가스 흡수계수 개발('25, 다시마 등 8종 → '26, 미역 등 5종 추가)
- 민-관 합동 갯벌 염생식물 복원* 및 바다숲 확대**($375.4 \rightarrow 540\text{km}^2$, ~'30)
 - * 갯벌복원사업(기아차 협업) : (1차) 경기 화성 ('23~'25) → (2차) 충남 서천('26~'29)
 - ** 현대차, 효성그룹, 포스코와 민-관 협력 바다숲 조성 진행 중(총 73억원, '24~'27)
- 블루바이오 산업 전주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생명자원 정보 집적화부터 R&D, 사업화 및 기업 지원까지 종합전략 마련('26.上)
 - * 美스트라타진社는 심해 미생물 활용 PCR(효소 연쇄반응) 시약 개발, 코로나19 검사 등에 활용
- 비수도권 기업 투자전용 「바다생활권 특화펀드(1,000억원, ~'30)」를 출범하고, 해양수산 창업 경진대회('26.5~9) 개최로 신기술 상용화 지원

5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해양리더십 확보 (국정과제 76)

□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혁신

대통령 말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국무회의, 7.17)

○ (관리체계) 선박·시설 중심 안전관리를 넘어 인적과실·오류까지 관리

* 5년간('20~'24) 해양사고(1,247건, 해심재결) 중 근무 태만 등 인적 과실사고는 84%(1,046건)

- 과실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다중 관리제도*** 구축(6개 항로 시범적용, '26)

* 선박선교 CCTV 설치 + 항로선속통항 기준 마련 + 표지위험표지 신설 + 관제 AI활용 경보기능 향상

- 해상교통 안전수칙 위반시 범칙금·벌점 신설, 운항자 피로·위험 신고제도* 도입 등 종합대책 마련('26)

* (항공) 종사자 피로 관리시스템(FRMS) → (선박) 종사자 피로·위험 신고제도 확대 추진

- AI 기술·운항·기상정보를 연계한 차세대 상황관리시스템 구축(~'30)

○ (맞춤형 안전관리) 국민·종사자 보호를 위해 현장 유형별로 안전 강화

- 항해당직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및 위반 시 제재 도입, 선교 내 CCTV 설치 검토 등 관리 강화

- 여객선 항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항속력제한 신설, 요주의 해역 AI 관제 경보기능 강화

- 모든 항만출입자 대상 안전수칙을 도입하고, 재해가 빈번한 사업장 퇴출, 소규모 사업장 재해 예방시설 우대 지원

- 영세 해양수산 사업장 대상 위험성평가 지원('26~), 안전보건 전문 인력 양성(연 30명 도입 추진) 및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 모든 어선 상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26.6~)하고, 5톤 미만 어선 자격요건 도입, 항해·무선설비 등 안전설비 설치 의무화 추진

○ 전 국민의 해양 안전수칙 준수와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해양 안전문화 혁신방안*」 마련('26.上)

* 생애 전주기 해양안전 교육, 전국 체험시설 확충, 안전문화 일상화 제도 등 도입

□ 불법조업 근절을 통한 해양주권 강화

- 中 불법어선의 침범에 대한 대응방식을 퇴거에서 나포로 전환하고, 국내처벌 후 중국 인계를 통한 추가처벌, 경제적 제재* 등 조치 강화
 - * 불법조업 벌금한도 상향(3→10억원), 비밀어창 등 新불법유형 담보금 기준 신설
-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 도입*으로 불법어업 수산물 수입 사전 차단
 - * 수산물 수입 시 정부기관 발급 어획증명서 제출(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안))
- 4,500톤급 대형 어업지도선(12.5~)을 활용하여 공해상 외국어선 승선검색
- 민간 인공위성을 활용한 감시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무인항공기 운용 ('26. 3대)을 통해 불법조업 모니터링 강화

□ 국익 중심의 해양영토 관리 및 글로벌 리더십 확보

대통령 말씀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25.12.3, 외신기자회견)

- 「독도이용 기본계획('26~'30)」* 수립('26.2)을 토대로 범정부 대응 추진('26~)
 - * 13개 기관 70여개 사업(5년간 총 4,100억원)
 - 독도 영상, e-book 등 청소년 맞춤 학습자료 제작(교육부 협업, '26~)
 - 대형 해양조사선(4천톤급) 투입('26.6~)으로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 무인도서(2,910개)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추진
 - * ('19~'25) 82% 완료 → ('26) 93%(321개 조사) → ('27) 100% 완료
 - UN해양총회('28)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경주 APEC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특별법 제정 및 범부처 준비기획단 출범('26.上)
 - G20('28.下)이 선진국 협의체인 점을 감안, UN해양총회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까지 확장된 정상외교의 장으로 활용
 - 국제해사기구와 공동으로 ‘세계 해사의 날’ 행사 개최(부산, '26.10월)
 - K-해운·조선 기술 및 북극항로 정책 홍보와 기업 간 거래 활성화 연계
- * 176개국 고위급 인사, 국제기구,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 등 약 2,500여명 참석 예상

IV. 주요 쟁점이슈

① 부산항 3.0, 세계 최고 항만 대도약

* (1.0) 북항(과거 개항장) → (2.0) 신항(세계 2위 환적 허브) → (3.0) 진해신항(세계 1위 항만시대)

- (부산항 현 위치) 물량 기준 컨테이너 세계 7위('24, 2,440만TEU), 환적 물량 세계 2위
 - * 정기 컨테이너 노선: **부산 259개(4위)** vs. 싱가포르 332개, 上상하이 321개, 上선전 261개
 - 항만 연결성 지수: ¹위상하이항, ²닝보-저우산항, ³싱가포르항, ⁴**부산항**, ⁵칭다오항
- ☞ 세계 3대 항로(미주-남방-북극)가 교차하는 지정학적 강점 활용 필요

□ (쟁점¹) 인근 경쟁항만의 규모 확장으로 부산항 경쟁력 저하 우려

⇒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로 세계 최대 항만 인프라 확보

- 컨테이너 부두, 방파제 등 '40년까지 총 12조 6,379억원 투입
 - * (선석수) (現) 40 → (改) 66개(1위) / (선석길이) (現) 18.8km → (改) 25.5km(2위)
- 진해신항 1단계는 3선석^{1-1단계} 개장('30) 후 6선석 추가 개장('32)
- 진해신항 2단계*도 조속 개발('26 예타 신청)하고, 민간부문의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항만 도입을 위해 하부시설 재정투입 확대방안 검토
 - * 글로벌 '컨' 물동량 유치 외 병커링 등 각종 서비스산업 유치 기반 조성



□ (쟁점2) 부산항 신항 터미널운영사 난립 및 과당경쟁으로 비효율 발생

⇒ 터미널운영사 간 협력 유도, 스마트 전환 등 운영 효율성 향상

- 진해신항은 단일 운영사(Mega operator)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피지컬 AI 기반 K-스마트항만으로 조성(UAE 협력 연계)
 - * 진해신항 1단계 개발 시 약 2조원 규모의 스마트 항만 하역장비 투입 예정
↳ 광양항 시범항만에서 국산 AI 운영기술 학습('26~) → 진해신항 도입('30~)
- 부산항 신항은 운영사(7개사) 간 환적화물 처리 등 단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 단계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점진적인 통합 유도
 - * 운영사 간 통합 운영 수준에 따라 통합 소요 비용(시스템 재구축, 시설보강 등 10~30억 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 스마트화 자금(15~70억 원) 차등 지원

□ (쟁점3) 고부가가치 항만서비스(MRO, 벙커링 등) 부족으로 기항 유인 약화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하여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부산항 신항에 대형선* 수리조선단지 신규 조성('26~, 민자)
 - * 美 해군 군수지원함 수리('25.11, 마산) 실적을 토대로 대형 '컨'선, 쇄빙선, 함정 등 수주
- 친환경선(암모니아 등) 확대, 북극물류(LNG 등) 대응 벙커링 인프라 조성을 위한 「친환경연료 벙커링 시설 구축전략」 수립
 - * 신항·진해신항에 LNG·암모니아·메탄올 연료·공급시설 개발 추진
- 항만 연결성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부산항과 연결가능한 해외 수출입 주요 물류거점 터미널 확보*
 - * (단기)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량터미널(미국 LA항, 브라질 산토스항 등) 지분 우선 투자 →
(장기) 글로벌 터미널운영사 설립으로 터미널 종합 관리

❖ ① 규모 확충, ② 운영효율 향상, ③ 종합서비스 제공을 연계한 발전전략 추진
→ 부산항이 싱가포르(세계 환적 1위 '컨' 항만)를 뛰어넘어
미국-아시아-유럽을 잇는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 도모

② 해상풍력 확산 지원

□ 현황 및 한계

- 바다가 육상에 비해 입지 확보 및 대규모 단지 조성이 용이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확대 추진 중
 - * (현재) 0.35GW(운용) → ('30) 10.5GW(착공)
- 추진과정에서 어업인과의 갈등 등 낮은 주민 수용성, 인프라(항만·선박) 미비, 대규모·장기간 해양개발에 대한 우려 등 제기

□ 주요내용

- **(수용성 확보)** 어업과 해상풍력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민관협의회***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의 능동적 참여 강화
 - * 「해상풍력법」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에 지역주민, 어업인 등 일정비율(50%) 이상 참여 보장
 - 어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해상풍력 단지 외곽에서 굴 양식을 실증('22~'25)하였으며, 풍력단지 내 양식 실증 추진(기획연구 중)
- **(이익공유)** 해상풍력법(제18조)에 따른 주민참여 이익공유를 위해 어업인과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하는 이익공유(안) 마련('26.上)
 - * 해상풍력법 18조 : 참여대상 주민·어업인의 범위, 금융지원 등을 기후부장관이 정함
- **(인프라)** 해상풍력 지원항만* 적기 조성을 위한 항만 개발 계획 마련,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로 보급 확대 기여
 - * 포항영일만항·새만금신항 등 일부 보완, 인천항·군산항 등 신규 개발 추진
- **(공간관리)** 대규모 공유수면을 장기간 사용하는 해상풍력 특성을 고려, 입지 발굴-이용-원상회복-사후관리 전주기에 대한 효율적 관리 추진
 - 계획입지제도 도입으로 정부 주도로 환경성·수용성이 확보된 입지를 선정
 - 원상회복 복구비 예치제 도입,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대규모 이용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실효성 제고('26.9 공유수면법 시행)

2026 해양수산 민생 정책

■ 해양기업 창업지원·신산업

해양기업 창업 지원

지방소재 유망 해양기업에
투자기회를 제공합니다.

※ '26년 150억원 / 5년간 총 1,000억원 출자 예정

스마트 항만

항만에도 AI기술을 적용! UAE 칼리파항-
부산·광양항에서 스마트 기술을 실증합니다.

※ UAE 순방 후속조치

■ 대국민 혜택

설 연휴 수산물 할인행사

2026년에도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을 가볍게! 할인행사는 계속됩니다.

※ '26년 총 1,000억원 규모

소규모 항만재생 사업

우리동네의 낡은 항만, 이제 국민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돌려드립니다.

※ 목포, 동해

■ 어업인 지원

인천해역 야간 조업 제한 해제

인천 해역에서 제한된 야간조업 제한 규제
이제 전면 해제 합니다.

※ 37° 30' 이남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 월 46,350원 → 50,350원

■ 생명존중 문화 확산

구명조끼 착용의무 확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이제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합니다.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여객선,
위험률 운반선사의 안전투자
내역을 매년 공시합니다.

여객선 전기차 대응장비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대비대응장비 보급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 연안여객선 97척 →
국제여객선 등 50척 추가

■ 해양수산 복지 증진

선내 최고급 인터넷 보급

태평양을 지나는 선박에서도
인터넷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스타링크와 연계하여
선내 최고속 인터넷 지원

어촌 복지버스 확산

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직접 찾아가서 의료, 생활,
식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섬 : 254 → 332개

섬 주민 교통권 보장

여객선 수리, 정비에 들어가도
인근항로 여객선을 활용해서
섬 주민 교통권을 든든하게
보장합니다.